

## 의대정원 줄다리기

이준규 / 경향신문 생활과학부 기자

**대**한의학협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엔 4개 의과대학이 신설되면서 의대수는 37개로 늘어났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정부와 의협단체간의 의대정원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국민보건과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의료인력의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증원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학협회는 현재의 의대정원만으로도 의료인력이 넘쳐 동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의대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그 주장 나름대로 이해가 가고 동결을 주장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다.

의대증설에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환자인 소비자가 의사의 부족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대기시간이 길어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으로 의사를 대하면 진료시간은 길어야 3분 내외라는 것이다. 환자가 밀리다 보니 의료공급자에게서 친절한 대접받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의료현실이라고 반문한다.

이는 다시 말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의사공급이 부족하다는 것.

또 오늘날의 사회는 갈수록 인력전문화를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전문인력의 증가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즉 대학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현실인데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일반 병·의원은 붐비지 않거나 한적한 형편이라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해 의대증설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또 앞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진단법과 각종 치료기술이 늘어 이것이 의사의 일을 대신해 주므로 의사의 수요는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적정한 의사수는 과연 얼마일까. 의료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인구 1만 명당 의사수가 20명선일 때 가장 적정하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와 의협단체간의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의대 증설에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의사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의대 증설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87년 현재 미국의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가 23.4명, 독일이 28명, 캐나다가 21.6명이었다.

'94년 현재 인구 1만 명당 의사수가 11명인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보사부는 오는 '95년부터 의대정원을 2백 명 늘릴 경우 이들이 본격 배출되는 오는 2010년의 의사수는 동결시보다 1천 5백여 명 증가, 인구 1만 명당 의사수가 18.6명에 달하고 교육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을 늘려나갈 경우 선진국 수준의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도 오는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1만여 명의 추가 의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8백 명 이상의 의대생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대한의학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현재의 정원만으로도 오는 2010년에는 의사수가 9만 1천여 명, 인구 1만 명당 의사수는 18.4명으로 증가해 의대정원을 동결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최근 10년간의 인구증가율이 0.9%에 그치는 반면 의료인력의 증가율은 6.8%로 인구대비 의사수는 점차 커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각 기관에 따라 적정 의사수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의 유리한 측면만을 강조 분석했기 때문이다.

의사증원을 강조하는 쪽은 앞으로 의료의 질향상과 서비스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욕구의 증가에 따라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남북통일 등 사회통합에 대비해 의료인력을 여유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반대하는 측은 가용의사와 면허 의사수를 혼돈하여 적정 의사수를 잘못 계산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의사인력 추계가 고무줄처럼 늘어나 국민들은 어느것이 옳고 그른지를 혼돈하고 있다.

따라서 의대정원의 증원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의 연구기관에 맡겨 합의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일 것 같다.